

오피니언

다산포럼

정지창



20세기 후반부는 적어도 한반도의 남쪽에서 일찍이 들도 보도 못한 엄청난 문화적 변동이 일어난 시기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문화사를 전공한 역사학자도 아니고 문화인류학자도 아니지만, 지금까지 내가 생애나 살아온 삶의 자취들을 되짚어보면 부분부분은 미세하지만 전제적으로는 혁명적인 생활방식의 변화를 겪어온 것 같다.

우선 거주지만 하더라도 나는 산골 강변마을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4학년까지 촌놈으로 자라다가 아버지의 이농(離農)에 따라 대전으로 이사했고, 대학에 들어간 이후 약 15년을 서울시민으로 살았으나 직장이 바뀜에 따라 부산을 거쳐 대구에서 생애의 후반부를 보내고 있다.

고향 마을은 땅으로 수물되고 선산의 산소들은 날끌꼬리로 바뀌었다. 그러나 우리 집안은 종교에 관계없이 무조건 환경이다. 시제는 없어지고 대신 주석날 날끌꼬리에서 차례를 지낸다. 종손인 장조카는 외국에 살고 있으니 기제사도 형님이 돌아가시면 더 이상 모시기가 힘들 것 같다.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던 유교적 정례·제사 풍속이 불과 한 세대만에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는가.

주거공간, 즉 집도 많이 바꾸었다. 생애 초기의 10여년은 조가집에 살다가 청소년 시절의 10년은 기와집이나 헛석집 같은

나의 20세기 생활문화사 서설

'단독주택'(이 말을 쓰려니 갑자기 낯선 느낌이 든다. 그냥 '집'이었던 것이 언제부터 관정용이나 군대용에 비슷한 '단독주택'으로 바뀌었을까?)에서 살았고, 그 후 40년 이상은 건설회사 이름이 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나 전제적으로 보면 나도 아파트 세대임이 명확하다.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서울에서 하숙집, 자취방을 전전하다가 결혼 후 술한 전세방을 거쳐 드디어 내 소유의 조그만 아파트를 마련하고, 그 후 조금씩 넓은 아파트로 옮겨온 셈인데, 중간에 서울서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는 바람에 다시 서울로 진입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부분적으로는 중신층의 착실향을 살았으나, 크게 보면 재테크에 무능하여 중산층에서 탈락한 소시민으로 분류될 것이다. 아마 전국민의 90% 이상이 생활환경 조사서에는 '중'으로 적겼지만, 그 내용상의 편차는 그야말로 천양지차라고 나는 생각한다.

한국인은 골프를 치는 사람과 치지 않는 (또는 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나는 골프를 치지 않는 쪽에 속한다. 군대는 갖다 오고 외국유학은 못한

신랑 같은 별식도 마다하지 않는다. 음식과 마찬가지로 노래나 음악도 이것저것 가리지 않는다. 여자친구는 송민도, 백설 희, 양희은을 좋아하지만, 국악 쪽에선 김용우나 김명자 같은 젊은 소리꾼들이 좋다.

밥 드린, 비틀즈도 존경하지만 신중현, 김민기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흔자서 피셔 디스카우의 독일가곡을 카세트 테이프로 듣는 맛도 기가 막히고, 관현악으로 편곡한 '님을 위한 행진곡'은 소리를 둘게 만든다. 이른바 '강남좌파' 비슷한 '크리밍'이나 반지하 자취방의 대학생 같은 장기라도 들을 만하다.

사람과 세상은 얼마나 복잡 다양한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살아온 삶의 과정을 어떤 것과 기준으로 재단하고 분류하는 순간, 그것은 추상화되고 단순화된 몇 개의 개념으로 (가령 진보, 보수 등으로) 고착되지만, 정작 삶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은 무시되거나 왜곡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20세기 후반부를 살아온 나 같은 세대는 자기도 모르게 문화사적 전환기의 거대한 조류에 휩쓸려 농경문화에서 도시산업문화, 또는 아파트문화로 이주한 첫 세대로 기록될 것 같다. <영남대 독문과 교수>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GO 칼럼

배영복



올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해이지만, 단순히 법 제정으로만 '공'을 세우려는 것은 물辱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설치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19조 제4항)에는 '장애인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

갈길 먼 '장애인차별금지법'

애인 아닌 사람과 등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현되기에 아직도 길이 바쁘다.

예컨대, 계단이나 승강기의 점자 표시는 오래돼 요철 표시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로워졌다. 보도블록의 경우도 시각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유도용 요철블록을 설치했지만 둘째 날 속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대부분의 보도블록 위에 노점상의 상품이 진열돼 있어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지하철 안의 점자블록도 각진 모퉁이를 도는 경우 비장애인보다 더 많이 걸어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 오히려 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중교통인 콜택시 등의 특별 교통수단과 저상버스 슬라이드가 내려오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인도의 높은 경계석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높은 인

분인은 참 머쓱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경우는 전체의 0.5%임을 감안할 때 장애인 대부분이 사고나 질병 등에 의한 후천적인 장애를 겪게 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그저 불쌍한 사람, 자신의 힘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리도록 시민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 최대 현안인 국립 아시아 문화의 전당과 개방형 야구장 신축에 장애인을 포함한 약자들의 이동권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사회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며, 무장애사회가 조성될 수 있어야 한다.

소외된 계층과 약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작은 관심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6만8000명의 장애인들도 광주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다.

<(사)광주장애인총연합회 사무처장>

밀폐된 목욕탕서 수면시 일산화탄소 질식 위험

요즘 목욕탕에서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일반 목욕탕이나 짐질방 목욕탕 주변에서 목욕객이 잠을 자는 것이 이상할 것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오래전부터 목욕탕에서 잠자는 게 일반적인 문화가 돼 버렸다.

그러나 목욕 도중, 또는 목욕탕에서 잠자다가 숨지는 사고는 또 다른 원인이 있음을 경고하고 싶다.

그 이유는 목욕탕이 대부분 지하이거나 지상의 아주 밀폐된 곳인데 그 안에 일산화탄소가 가득 차 있고 잠자다가 그걸 마셔서 중독돼 사망하는 것이다.

목욕탕에서는 가스 온수기기를 많이 사용한다. 이 온수기기는 목욕탕은 사방이 꽉 막힌 공간이다 보니 밀폐된 곳에서 가스가

연소하면서 일산화탄소를 다량 발생시켜 잠자는 사람을 질식시킬 수 있는 것이다.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를 사용할 때 불완전하게 연소할 경우 10분 만에 허용치의 6배까지 넘는 양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사람의 사망할 수 있는 수치까지 오르는 데는 2~3분이며 죽어다는 것이다.

목욕탕 업주들은 목욕실 내부의 환기와 함께 항상 안전조치를 취해줘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목욕탕은 몸을 씻는 것 말고 깐값에 부담없이 잠자 수 있는 서민들의 공간으로 환기와 늘 신경 쓰고, 소방당국도 목욕탕의 환기상태를 상시로 점검해주기 바란다.

▲김재형·광주 북구 북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4918/e-mail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설

동사무소 주차장 공무원 차량이 '먼저' 라니

광주시 각 자치구가 조성한 동(洞) 주민센터나 복지회관 내 주차장이 공무원 전용 주차장으로 전락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다고 한다. 광주시 서구·남구·북구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모두 50억5700만원의 특별예산을 들여 주민센터와 복지회관 등에 민원인 편의를 위해 7곳의 주차장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주차장에 공무원과 인근 주민들이 대부분 주차를 해 민원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본보 취재진이 최근 상무2동 주민센터와 복지회관 등 주차장의 이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주민센터 등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주차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도 인근 상가 차량들이 차지하고, 나머지도 인근 차량들이 기다리거나 멀리 떨어진 곳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분명 어불성설이다.

차제에 땅을 비싸게 매입하기 보다 인근 부지를 임대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자치구는 민원인 주차장에 대해 사실 조사와 효율성을 따져보고 민원인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정작 민원인은 주민센터를 찾을 때마다 빈 자리를 기다리거나 멀리 떨어진 곳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분명 어불성설이다.

설득력 없는 車보험료 인상 당장 철회해야

손해보험사들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료를 크게 올릴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1조5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거둔 손보업계가 운전자를 '봉'으로 아는 것 아니고 무엇인가.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최소 6.1%에서 최대 6.8%에 이르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안을 보험개발원에 제출했거나 이번 주 내 제출할 예정이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대형사들이 6.1% 가량의 인상안을 제출했거나 할 정이며, 중소사는 6.3~6.8%의 인상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논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차 사고 때문에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늘어 보험료를 올려받아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다. 이번에는 정비요금 인상이라는 이유를 추가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들의 인상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올린 이익은 무려 1조5천억 원

이 넘었다. 특히 5년 연속 1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거둔 최근 5년간 손보업계의 보험료 수익은 해마다 평균 13.4%씩 늘었다. 이는 손해율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손해보험사들이 꾸준히 대규모 이익을 냈다는 의미다.

또한, 정비요금 인상 평균을 대고 있으나 정비업체 과잉청구 단속 등 자체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무조건 소비자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손해보험사의 소비자에 대한 횡포가 아닐 수 없다.

보험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 보험료를 올리려고 하는 데 대해 밀약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관계당국은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물론,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손보업계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자동차 보험료 대폭 인상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만약 계속 소비자를 '봉'으로 삼으려 한다면 거센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다. 그래서 이판이나 사판은 그 자체로 '끌'을 의미하는 말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승려 가운데는 사찰 살림살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판과, 결전을 해석하고 수행에 주력하는 이판으로 나뉘었다.

최근 입적한 해남 대흥사의 조실(祖室·사찰의 최고 어른 스님)이나 조계종 원로의원인 천운 큰스님은 쉬우면서도 정곡을 치르는 법문과 함께 입적 직전까지 참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총무원 교무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광주 정관 종교 이사장, 사회복지법인 향립원 원장, 광주 우산종합복지관 관장 등을 맡아 사회활동도 활발하게 벌였다.

마더로 수행에 충실했던 사찰의 살림살이와 종생의 삶까지도 쟁기며 이판과 사판을 넘나든 것이다.

관념이나 현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종생을 위한 삶을 살다간 전운스님의 행적에서 위정자부터 소시민까지 배울 점은 매우 많다.

이판사판